

냉전기 서독의 심리전과 시사점*

건설적 선전을 중심으로

김태현**

❖ 요약 ❖

본고는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열등한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의 심리전을 수행해야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심리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국경독재체제’와 ‘건설적 선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독의 대 동독 정보유입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정보유입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둔다. 냉전기 동서독 간에는 주민의 상호방문, 우편물 교환, TV시청 등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외

부정보 통제수준 면에서 남북한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동독은 ‘국경’이 폐쇄되어야 체제생존이 유지되는 국경독재체제로서 정보유입이 체제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에 본고는 ‘진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동경심과 공감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둔 건설적 선전의 순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에 기초한 서독의 심리전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대북심리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어: 건설적 선전, 국경독재체제, 서독연방군, 정보유입, 대북심리전

I. 머리말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반도는 세력균형을 넘어 ‘공포의 균형’에 의해 지탱되는 평화체제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북미간 ‘4월 위기설’과 ‘8월 위기설’이 거론되던 시기에 북한과 미국이 선불리 군사공격을 개시하지 못하던 교착상태의 지속은 그러한 ‘균형’ 논리를 반증한다.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남북한 간에는 전쟁에 의한 상대 체제의 전복이 사실상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핵공포에 의한 안정적인 상호억제가 작동하던 미소 냉전기와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1호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번호-2015S1A5A801804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유사하게 ‘싸울 수 없는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Osgood 2006, 31).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한 체제경쟁은 군사적 승리보다는 ‘심리적 영역’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권의 생존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국경독재체제의 형태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적 요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경독재체제란 ‘국경’이라는 경계를 통해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고립된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바로 이러한 체제하에서 폭압적 공포통치에 의한 야만적 형태로 정권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Lindenberger 1999). 북한에게 국경의 개방은 곧 붕괴를 의미한다. 개방과 개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폭압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경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공안조직을 동원하여 주민사찰과 감시, 언론통제, 공포통치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심리전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대북정보유입은 북한주민의 의식을 계몽하여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을 평화롭게 붕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북한주민의 실상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사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맞춤형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2010년 ‘아랍의 봄’과 같은 혁명적 상황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되고 있다(태영호 2017. 11. 2).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에서 한국의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협상에 임했던 황병서와 김양건이 ‘총 한번 쏘지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고 축제를 벌였다는 일각의 첩보를 복기해보면 ‘심리전’이 북한정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동아일보, 2017. 11. 12). 일부 탈북자는 대북 라디오방송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한다(뉴시스, 2017. 10. 9). 2017년 11월 JSA를 통해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국의 걸 그룹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한 것은 북한 청년들이 얼마나 한류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는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MBN, 2017. 12. 25). 2017년 12월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의미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과 심멸을 강조하기 까지 했다(조선중앙통신, 2017. 12. 24).

이러한 남북체제 경쟁의 현 주소는 비단 오늘날 한반도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

다. 이미 냉전기 동서독도 남북 경쟁체제와 유사한 경험을 노정했다. 냉전은 체제경쟁 양상으로 발전되면서 양진영에서는 심리전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하였다. 적과 동지의 구분이 뚜렷한 이념분쟁에서 선전선동, 회유, 압박, 설득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적용되었다(BMVG 1974, 7-8).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서독 정부와 군의 대동독 심리전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일 통일직전까지 교묘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Drews 2006, 25; Der Spiegel 1989. 5. 15). 서독군 심리전단장 부크벤더(Buchbender 2015)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군 장성을 포섭하여 정보출처로 활용할 정도로 과감한 방식의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시 동독국가보위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소련과 동독정권은 미국의 방송 선전활동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였다(Johnson & Parta 2010, xi).¹⁾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열등한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의 심리전을 수행해야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심리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국경독재체제’와 ‘건설적 선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독의 대 동독 정보유입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정보유입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둔다. 냉전기 동서독 간에는 주민의 상호방문, 우편물 교환, TV시청 등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외부정보 통제수준 면에서 남북한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정상돈 2017, 66). 그럼에도 북한과 동독은 ‘국경’이 폐쇄되어야 체제생존이 유지되는 국경독재체제로서 정보유입이 체제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에 본고는 ‘진실’에 기반 한 정보를 통해 동경심과 공감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둔 건설적 선전의 순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에 기초한 서독의 심리전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대북심리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이전 서독의 심리전 수행에 대한 기존 학술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정상돈(2017, 47)이 지적하듯이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동독 내 서독정보 유입과정을 소개하는 일만해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우선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국내 연구논문인 김태현(2015)의 “냉전기 서독연방군의 심리전체계 연구: 조직과 전략”과 정상돈(2017)의 “동독내 서독정보 유입의 과정과 방법”의

1) BStU, Berlin, MfS HAXX ZMA 914, Obtained by A. Ross Johnson, Translated by Christian Ostermann; Document No. 4: 1970. *Stasi Report on West German Government's Attitude to RFE and RL.*

연구성과를 토대로 통일이전 서독정부와 군의 심리전 수행의 특징을 시대별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한걸음 나아가 서독 심리전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독일 1차 사료와 2차 연구물을 탐색하여 서독 심리전 연구에 대한 분석의 내연을 심화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²⁾

논문의 구성으로서 본 논문은 2장에서 건설적 선전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서독연방군의 심리전 전략에 대해서 다루되 신동방정책 이전의 1960-1972년대 ‘파괴적 선전’의 수행기간과 신동방정책 시행이후인 1972-1990년간의 ‘건설적 선전’의 기간을 구분하여 변화양상과 효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서독의 심리전이 한국의 대북 심리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개념적 논의: 건설적 선전과 국경독재체제

1. 심리전과 선전: 개념 및 특징

선전(propaganda)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다. 선전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도로 기획된 개인 또는 집단의 의견과 행동의 표현”으로 정의된다(Lee 1972, 15). 라스웰(Lasswell, 1971, 195)에 따르면 선전이란 “사회적 제안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인간의 의견과 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자국민 동원, 동맹관계 유지, 중립세력에 대한 친선 유지 및 협력 도모, 적의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목적에 이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군사, 경제, 선전 등 ‘3개의 전선’으로 수행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리네바르거(Linebarger, 1960, 8)는 선전을 ‘한 집단의 견해, 규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의사전달의 계획적 사용’이라고 규정하였다. 종합하자면, 선전은 특정

2) Wagner, Armin & Uhl, Matthias. 2007. *BND contra Sowjetunion: Westdeutsche Militaerspionage in der DDR, MGFA: Ch. Links.*; Wenzke, Ruediger. 2005. *Staatsfeinde in Uniform? Widerstaendiges Verhalten und Politische Verfolgung in der NVA*, Berlin: Ch. Links Verlag.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회체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처럼 하나의 갈등 현안에 대해 집단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설득’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전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실제, 선전은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기간에 연합군이 독일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무기 중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었다(Stern-Rubarth 1921, 3). 선전이라는 개념은 평시에는 상업적 의미에서 ‘광고’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못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정치투쟁’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징, 문학, 음악, 신화, 잡지, 메모, 벽보, 영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이광현 1993). 그러나 선전이라는 개념은 1940년대 독일 나치정권의 악용으로 인해 ‘더러운 술수(dirty tricks)’, ‘뇌세탁(brainwashing)’ 등의 부정적 어감을 연상시키면서 전후에는 서구 학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다(Taylor 2003). 대신에 공공관계(public relations), 설득(persuasion), 정보작전(information warfare) 등과 함께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심리전의 개념은 선전의 의미와 유사하다. 美군사교리에 따르면 심리전은 “감정, 동기, 목표, 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 조직, 집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별적인 정보와 징후들을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oD 2011, I-1). 이러한 맥락에서 패덕(Paddock 1989, 45)은 심리작전을 “인간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된 의사소통의 사용”이라고 규정하였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정치 및 군사에 있어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 측 외의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주체측이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조직적·계획적 사용”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조영갑 2006, 35). 결국, 선전과 심리전은 인간의 ‘심리’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본질적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전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교묘히 파고드는데 주안을 둔다. 특히 인간의 생존 및 안전과 관련된 공포심과 결합해서 심리전이 시행될 경우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Ganser 2005, 28). 이를 통해 적대 집단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혼란을 조성하며, 대응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Paddock 1989, 45).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전에는 대상 집단의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치, 군사, 이념적 수단 등이 이용된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위협

하여 소련의 양보를 얻어냈던 쿠바미사일 위기시의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그리고 탈 냉전기 코소보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전의 정당성(jus ad bellum)을 호소하기 위해 전개했던 방송 및 미디어 활동과 같은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형태의 심리전을 발전시켜 적용해 왔다(Bernstein 1989, 145). 이렇듯 심리전은 전쟁 또는 전쟁수준의 무혈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노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도 유사하다(Codevilla 1989, 77).

심리전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최근까지도 강압외교, 정치전, 정보작전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러시아는 크리미아반도를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통제력 회복을 시도하던 미국과 나토의 접근을 이격시키기 위해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것이 허풍이 되었건 신뢰성 있는 첩보든지 간에 서방측의 행동을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푸틴은 방송요원들을 이용하여 밤낮 없이 반미선전을 인터넷, 방송 송출, 신문을 통해 흘려보내게 했다(Wall Street Journal 2015. 4. 14.).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쟁목표를 승리가 아닌 '공적 관계(public relations)'에 두는 푸틴의 전쟁수행방식을 '새로운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³⁾ 러시아는 서방측과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 자신을 '약자'로 자처하면서 선전을 이용하여 서방측을 교란하여 유럽연합의 단결력을 와해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CEE 2015).

종합하자면, 심리전과 선전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심리전이라는 용어는 선전의 부정적 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긴 하나 '말과 언어, 또는 음악과 미술 등의 표현을 조작함으로써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며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조직적인 설득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Taylor 2003, 6; Lasswell, 1995, 13). 나아가, 선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생각과 의견을 변화시키는데 있으며 행동양식의 변화를 유발하여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education)의 기능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undhausen 1975, 11). 선전을 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 과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국민 대상으

3) "Putin's New Warfare," in: <http://www.fpri.org/print/2152>(검색일: 2017.12.20).

로 행했던 연합국에 의한 ‘재교육 프로젝트’도 선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2. 건설적 선전의 개념과 특징

선전은 ‘파괴적(destructive)’ 또는 ‘건설적(constructive)’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Lasswell, 1971). 우선, 파괴적 선전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상대집단의 사기를 꺾어 복종과 순종을 유도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파괴적 선전은 설정한 목표에 우호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도로 왜곡된 표현을 통제적으로 배포하는데 주안을 둔다(Choukas 1965, 37). 이러한 방식의 선전은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정보성’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 적을 부정적으로 각색하는데 목적을 두는 ‘조작성’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파괴적 선전은 거짓과 진실에 상관없이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선전 전략은 상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정보침투’의 강압적 속성을 띠게 된다. 파괴적 선전이 평시에는 적용될 경우 대상 집단의 정권을 악마화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정권, 군, 주민간의 분리를 조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림 1〉 선전의 유형: 파괴적 선전과 건설적 선전

구분	파괴적 선전 (destructive Propaganda)	건설적 선전 (constructive Propaganda)
방법	공포심-대상집단의 악마화	공감대-인간성 회복
수단	조작적 선전	사실적 선전
메커니즘	강압적	자발적
목표	복종과 순응	적대의식 완화

반면, 건설적 선전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생활상에 대한 ‘진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선전하여 대상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감과 동경심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선전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이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형태의 선전은 상대 집단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같은 일방적·강압적 방식의 정보침투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집단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자극하여 상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경로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의 선전은 ‘인간성 회복’이라는 자유주의적 형태로서 상대의 ‘공감’을 획득하는데 주안을 둔다.

건설적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대의 형성이다. 선전이 요망하는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최신회된 ‘지식’이 요구된다. 선전내용은 그 해당 대상 집단의 심리적 욕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전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나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Linebarger, 1960, 166). 부메랑 효과는 의도했던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집단의 정신세계로 완전히 몰두하여 감정이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적이라는 개념 속에 항상 ‘인간’이라는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과 논리구성이 선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 선전의 핵심은 ‘진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때 선전이 진실과 조우할 때 효력을 발휘하므로 모든 선전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Plenge, 1922), 선전의 본질이 ‘여론 선동’에 있기 때문에 그 선동은 진실과 사실정합성에 관계없이 ‘사상과 생각’을 확산시키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양립한다(Toennies, 1981, 79). 후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전은 모든 유형의 ‘거짓과 진실의 확산’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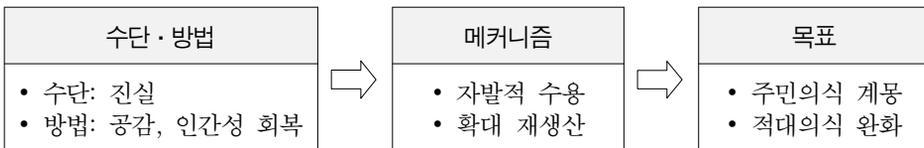
두 가지 선전전략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식이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파괴적 또는 건설적 선전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당면한 상황에 따라 상대집단의 구성원이 처한 욕구와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변수를 포착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선전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가 약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심리전에서는 ‘공감’과 ‘자발성’에 초점을 맞춘 건설적 선전을 수행할 때 선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건설적 선전은 장기적인 노력과 시간 소모가 예견되며, 유입되는 정보의 ‘신뢰성’도 담보되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3. 국경독재체제와 건설적 선전

국경독재체제에 있어 외부의 자유주의 사조의 유입과 내부로의 정보 확산은 치명적일 수 있다. 국경독재체제는 ‘국경’이라는 경계를 통해 외부세계와 단절된 고립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유사조는 국경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권에 있어 국경은 정권생존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국경을 유지해야만 체제내부를 외부세계와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명확히 경계 지을 수 있으며(Schmitt 1963), 국경에 의해 외부세계와 공간적,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체제정당성의 구축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김태현 2017). 이러한 방식으로 경계 지어진 울타리 내부에서만 독재정권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적과 동지를 규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구조적 폭력’을 발휘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Galtung 1975).

이 때문에 국경독재체제는 폭력을 동원하여 국경을 수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독재체제에서 국경개방은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정권엘리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정권붕괴 위기시 동독인민군은 상비병력 19만명, 준군사 조직 50만명 등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권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1980년 중후반 동방정책, 헬싱키조약, 평화운동,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등에 의해 ‘탈 이념화된 사회체제’가 형성되면서 국가폭력을 부당하게 바라보는 의식의 형성이 구조화되었던 탓이 크다(Sabrow 2012, 30). 외부 세계로부터 자유주의 사상과 사조유입은 주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노예적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폭압 받아오고 기만당해왔던 것에 대해 분노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건설적 선전의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적 선전을 통한 정보유입은 국경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경독재체제 종식은 외부 정보유입에 의한 체제내 구성

원들의 적대의식 완화와 저항의지의 약화로 인해 촉진되는 자발적인 국경해체 다이내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수단은 진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유입을 통해 국경내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주는 데에 있다. 건설적 선전의 메커니즘은 주민들이 선전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들 스스로 그 정보를 신뢰하여 사회내부로 확대 재생산하는 경로에 의존한다. 주민들이 만약 자신들이 접촉한 정보가 자신들에게 유용하며 ‘진실’에 근접하다는 신뢰감이 형성되면 강제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방송, 매체 등 고도의 기술적인 매개물 없이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유통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사회내부에 확산될 수 있다. 그만큼 폐쇄된 사회에서 간절하게 요구되는 정보를 진실하게, 신뢰성 있게 유입하는 것은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수용된 정보는 주민들의 적대 감정이나 의식을 완화시키고 의식 계몽을 자극하여 자신의 폭압적 정권을 부당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권-주민간의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자신의 정권이 자신에게 행하는 폭력을 부당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될수록 정권의 장악력 훼손은 증가할 것이다. 정권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해 주민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주민에 의한 집단저항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Sabrow 2012). 건설적 선전은 바로 이러한 국가폭력의 부당성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만들어서 저항의 집단 심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Ⅲ. 냉전기 서독의 심리전

1. 1972년 이전 서독 심리전 : 파괴적 선전에서 건설적 선전으로

1972년 이전의 서독의 정보유입작전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1958-1968년) 전략은 파괴적 심리전으로서 동서독 체제경쟁 특성상 동독체제의 문제점과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정책적으로 선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냉전 초기단

계에 기획된 1단계 작전의 주안점은 동독을 악마화하여 군과 주민으로 하여금 동독이라는 ‘독재체제’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었다. 이 당시 정보유입의 특징을 ‘자유를 향한 탈출(sprung in die freiheit)’라 규정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Buchbender 2015). 냉전 초기의 동서독간의 치열한 체제경쟁 양상을 반영하듯 1950-1960년대 서독의 정보유입의 중요한 수단은 공세적인 전단 살포와 방송이었다. 서독은 심리전부대를 1959년 미국의 심리전부대를 모체로 하여 전격적으로 창설하고, 확장기 및 전단중대, 라디오방송중대를 전방지역에 배치하여 1989년까지 운용하였다(김태현 2015).

이 시기 서독은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안심정보’를 유입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1960년대까지 서독의 정보유입은 전단 살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메시지는 서독의 실상을 홍보하고 동독 국경수비대의 동독 이탈주민 및 군인에 대한 충격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독군은 동독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동일한 형태의 ‘위장신문’을 제작하여 동독지역에 살포하였다. 이것은 동독군과 주민들이 서독의 선전물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전단지를 읽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변명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인민군’이라는 위장신문은 매 간행호마다 약 500,000부가 발행되어 살포되었으며 ‘중부독일 노동신문’은 서독의 경제사회 정세를 담아 대량으로 유포되었다(김태현 2015, 150).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서적을 휴대용으로 제작하여 1962년 한 해 동안 동독상공에 37,000부, 해상을 통해 26,000부를 살포하였다(Drews 2006, 211).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군과 동독의 기타 무장기관들은 서독의 점증하는 선전공세의 영향권에 노출되었다. 냉전의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동서독 쟁방 간에 수행된 심리전과정에서 1964년 한 해 동안 200,000장 이상의 심리전단지가 동독국경으로 살포되었다(Wenzke 2005, 173). 이 중에서 25% 이상은 동독인민군과 국경수비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정보유입의 2단계기간에는 건설적 선전이 태동되던 시기였다. 서독은 1968년을 전후하여 동독의 공산체제를 비판하여 ‘악마화’하는 대신 서독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노출시켜 서독에 대한 동독주민과 군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경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Buchbender 2015). 1960년 후반부터 서독의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동서독간 체제경쟁이 사실상 서독의 승리로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서독은 사실상 동독체제를 비방하는 파괴적 선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

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서독이 전면에 나서서 굳이 체제경쟁에서의 비교우위와 동독의 열등성을 파괴적으로 '선전'하지 않아도 동독지역 주민들은 이미 체제경쟁에 뒤쳐지고 있는 동독의 실상을 점차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서독지역을 방문했던 동독주민들이 직접 서독사회의 발전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확대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동독에 남아 있는 친척들에게 서독의 발전상을 '입소문'을 통해 확대시키는 정보유입은 동독정부에게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정상돈 2017, 55).

이 시기부터 서독의 정보유입 활동은 연방군 수준의 심리전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심리전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서독정권은 이른바 '진실의 무기화(wirklichkeit als waffe)'라는 개념을 토대로 서독체제의 실상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동독인들에게 홍보하고 의식을 계몽하여 서독의 수준 높은 '실생활'과 '삶의 질', 그리고 자유에 대해 동경을 하도록 만들었다. 서독은 동독체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동독 주민에게 정보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 동독정권의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서독의 실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독군과 주민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장악했던 서독은 가공되지 않은 현실속의 서독 사회생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서독주민의 '일 거수 일투족'이 동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2. 1972년 이후 심리전의 특징: 건설적 선전의 지속

19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 체결로 상호 군사적 심리전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지되면서 서독 정보유입의 큰 축은 연방군과 정부의 공식적인 심리전 활동에서 대중화된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매체로 이동하였다. 1972년 신동방정책 이후 서독의 동독내 정보유입은 서독군의 정보유입작전은 제한되었음에도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더 확대되었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많은 실생활 정보는 인위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서독정권과 군이 '가공한 정보'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진실 정보'가 동독인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동독주민의 의식계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Buchbender 2015). 동독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인 소재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여행상품 등이었는데 이 광고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끈 이슈는 상품의 가격정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동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신의 동독에서의 삶과 비교하는 등 실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1970년대 TV를 소유한 동독주민의 70%는 서독 TV방송을 시청하였는데 동독주민이 서독방송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서독을 방문할 때 마다 사실로 확인되어 신뢰를 받게 되었다(정상돈 2017, 60).

한편, 동독군 장병들에게 효과적이었던 서독 정보유입의 주요수단으로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 서독은 1966년에 동독인민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60개가 넘는 방송을 송출했다. 서베를린방송(RIAS) 방송은 베를린장벽에서 사망한 주민들과 관련하여 국경수비대의 책임을 일깨우는 것과 동독군에서 개개 장병들의 법적 지위를 일깨우는 등 동독군 지휘부에게 장병들의 사기와 대적관과 관련하여 우려감을 고조시키는 내용들을 다루었다.⁴⁾ 이밖에도 서독은 ‘독일방송(Deutschlandfunk)’, ‘라디오 룩셈부르크(Radio Luxemburg)’, ‘북부 독일방송(Norddeutsche Rundfunk)’ 등의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미국·영국 방송국들도 각각 자국의 심리전 방송을 송출하였다.

동독군의 정치군관들은 병영생활 내·외부에 전달되는 ‘적성방송’이 증가하는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졌다. 일반 동독주민들의 대다수는 서독의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던 반면 동독군 장병들에게는 여전히 ‘적성방송’ 청취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물론, 실제로는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서독방송청취를 암묵적으로 허용했으며 병사와 부사관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서독방송의 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군구에서는 1971년~1972년 약 2,333명(병사 1597명, 부사관 709명, 장교27명)이 서구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BA-MA:VA-P-01/7576, 1972). 이 시기 국경수비대에서는 약 5,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BI.80, 1972). 1981~1982년에는 국경수비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조사에서 매월 약 1,000건의 ‘적성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AZN P-2290, 1981). 동독군 내에서 서독의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시청을 수신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았던 음성청취자들의 사례를 합치면 실제 청취자 수는 훨씬 더 많았다고 추정된다. 서방방송 수신은 호네커(E. Honecker) 시대에 와서 강제전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음에도, 1972년 10월부터

4) 리아스(RIAS, Rundfunk im Amerikanischen Sektor)는 서베를린의 미국점령지에 상주했던 방송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미 군정청이 설립한 이래 냉전기 동독주민을 겨냥하여 서방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1973년 2월까지 국경수비대에서만 ‘적성방송 청취’로 인해 12건의 당 재판이 열렸다. 여기에는 2명의 병사, 9명의 부사관, 그리고 1명의 장교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7건의 경징계, 그리고 5건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BA-MA: P-1262, 1973).

1970년대 후반부터 동독군내에는 서독방송을 ‘집단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군형법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에는 제11국경수비대 교육 연대의 간부숙소에서 장교1명, 부사관 19명, 군무원 1명이 집단 청취하는가 하면 국경수비연대 1개 중대에서 장교 12명과 부사관 5명이 집단으로 청취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연대의 정치위원들이 당 재판에 회부되었다(P-1540, 1978). 1980년에는 부사관 학교에서 중위 1명과 부사관들이 집단으로 서방 방송을 청취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장교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또한, 공산당이 1976년 이후 정기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해 서방세계의 정보를 접한 부사관 1명이 당의 방침에 대해 의심을 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P-1737, 1980). 1983년에는 소령 1명이 장기간 서독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했다는 명목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병사로 강등되어 군에서 퇴출되었다. 이 당시 당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군 군관들의 계급투쟁 의식이 약화되고 당 간부와 군상급자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다(DVW1/43824, 1983).

동독군에서 서방매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당의 끈질긴 노력에 불구하고 부대 내외부에서 서방진영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공산당 간부 또는 상급자조차도 점차 ‘불법 청취’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부하들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들은 부하들의 불법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경고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등 직접적 법적 처벌로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적성 방송’은 동독군내에서 서독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주요통로가 되는 것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청취행위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하였다(VA-P-01/7576, 1972).

3. 평가: 심리전의 효과와 동독의 딜레마

서독의 전단 살포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62년 서독이 동독인민군 군인들의 반응을 익명의 우편물 회수방식으로 조사해본 결과 조사에 응한 94%의

군인들이 전단지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BMVg 1967, 7). 1967년 동독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서독군의 심리전이 동독국경수비대 병사들에게 이념적 분열을 유발하였으며 집중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Drews 2006, 214). 동독인민군은 서독군이 살포한 전단을 회수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국경수비대와 학생, 노인까지 동원하였다(Baerwald 1991, 64). 1972년 이전까지 서독이 살포한 전단은 한 해 동안 수십만 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기 때문에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의 정보유입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전단 살포 보다 효과가 컸던 정보유입 매체는 방송이었다. 동독공산당과 군에서는 서독의 방송심리전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다(Wenzke 2005, 173). 드레스덴 육군사관학교부속 사회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방송 영향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독군 장병들이 충분히 교육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서구방송의 주요 목적이 동독군과 경비대를 비방하고, 동독군의 탈영을 유도, 병역거부, 그리고 반전주의와 항명을 선동하는데 있다고 보았다(Bericht der HA-I, 1962). 국가보위부는 동독지역의 장병들이 군복무와 정권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ferat zur Jahreskonferenz des MfS, 1964). 예를 들어, '1953년 베를린 사태'를 다루는 세미나시간에 어느 부사관 후보생은 서구매체의 '선전 내용'을 인용하여 1953년 6월 17일 발생한 베를린 사건을 '인민봉기'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소련군이 법적으로 동독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던 그 부사관은 '반국가적 음모'와 '탈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Militaerbezirk Leipzig, 1964).

서구매체의 영향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유행가요와 팝은 동독청소년에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동독에는 비밀리에 많은 도시에서 클럽이 생겨났으며, 병영 내에서도 유사한 사조가 번져나갔다. 예를 들어, 일부 부대의 경우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동아리에서는 군복무에 대한 '태업'의 움직임도 있었다(Militaerbezirk Leipzig, 1964). 동독군은 징계조치를 강화하여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는데, 음악동아리를 폐쇄하고 동아리 회원 장병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모든 지휘관과 정치군관은 서구 매체를 통한 '이념적 침투'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요구받았다(BA-MA: VA-P-01/5916, 1966).

1972년 이후 서독의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동독의 경계심은 오히려 동독군내에서

회의적인 논쟁을 유발했다. 소련, 폴란드, 동독, 서독간 국제협약 체결로 인해 동독 사회와 동독군에 대해 더욱 강화되었던 외부사조의 침투는 동독군 장병들의 이념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BStU: HA I 5865, 1970). 1971년 동독군 내부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병사의 76.8%와 부사관의 93.1%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동독의 대서방 적대정책을 회의적으로 인식하였다(AZN Strausberg P-2977, 1971). 동독정권은 서독 브란트(W. Brandt)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일종의 ‘평화공세’라고 폄훼하였지만, 점차 많은 동독군의 장병들은 화해정책의 영향으로 서독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동독군 내부에서 정치적 긴장완화 속에서 군의 고도화된 전투준비태세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1972년 라이프치히(Leipzig) 군구 소속 정치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적지 않은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당이 지시하는) 대적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었다(Militaerbezirk Leipzig, 1972). 기록에 따르면 상사급 부사관 한명이 “이제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전투준비태세의 의미를 상실했으며, 고도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요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였다(AZN Strausberg P-1262, 1973). 라이프치히에 주둔한 부대 소속의 몇몇 젊은 장교들은 당의 방침과 달리 ‘공포의 균형’이 유럽에서의 무장분쟁가능성을 줄인다는 당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VA-P-01/7576, 1972).

서독의 건설적 선전이 동독군내 적대의식 완화와 동독군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해제된 자료만으로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서독의 심리전이 1989년 동독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독군의 ‘천안문식 해법’을 기피하도록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서독의 건설적 선전 노력은 통일이전까지 지속되었고, 동독군 지휘부는 그러한 선전의 영향력 하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꼈으며, 1989년 동독의 불안정 사태와 변혁기 과정에서 동독군은 자국민을 상대로 유혈적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통일 과정에서 서독군에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IV. 시사점 및 발전방향

1. 정보유입작전의 중요성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심리전은 상호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중요한 무혈전쟁의 수단이다. 북한 주민들은 혹독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중독’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탈북민의 88%가 한국 영상물을 북한지역에서도 시청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조선일보, 2017. 12. 27).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서 정권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간주하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벌여나가자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 2017. 12. 24). 이것은 북한당국에 의한 주민감시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대북 심리전과 선전이 북한정권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외부 정부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연방군의 심리전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안전을 배려한 ‘안심정보’를 개발했다는 데 있다. 안심정보란 북한 당국의 검열로부터 안심하고 접할 수 있는 정보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실명이 발각되지 않거나 또는 검열시 증거로 남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뜻한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유통되는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와 동일한 형태의 위장신문을 제작하여 북한사회 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다가 발각되어도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적 선전은 궁극적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정보를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경로를 따른다. 여기서 ‘틈새사회(Nischengesellschaft)’에 대한 공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틈새사회란 당과 국가기관의 감시가 느슨한 사적인 공간으로서 가족,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사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Gaus 1987). 북한주민들도 공식사회와 틈새사회 등 두 가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직장, 병원, 군대와 같은 북한의 공식사회는 정권이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조형해나가는 ‘선전국가’ 형태로 작동된다. 만약 선전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사회에서의 생활은 영화 ‘태양아래서(만스키 감독)’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개인이 극장국의 ‘배우’처럼 역할극을 수행해야 한다(와다 하루끼 2012).

반면, 틈새사회는 당국의 이념적 지배가 느슨한 공간으로서 거대한 선전체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나마 진솔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북한사회는 가정마저도 공식 사회화할 정도로 극단적인 감시와 통제체제를 가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의 가정 내 도청,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감시와 신고 등의 통제기제와 쇠뇌를 통해 틈새사회가 들어설 공간마저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만큼은 틈새사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공간에서만만큼은 적어도 자신들의 당국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교환하고 ‘탈북’과 같은 ‘모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한’ 정보도 이 틈새사회를 통해 유통이 되며, 이 정보가 당국에서 강요한 선전정보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문에 주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정보유입에서 장마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틈새사회는 가정뿐만 아니라 장마당과 같은 공개적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북한내부에는 400여개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다(매일경제, 2017. 12. 5).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층은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와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들의 ‘사고’마저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장마당에는 USB, SD카드 등 디지털 기기가 북중 국경으로 유입되어 한국 영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장마당에는 군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한류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북한 군인에 대한 외부문화의 접촉은 체제내구력을 약화시키며, 이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 보다는 ‘동경심’을 가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조선일보, 2017. 12. 27). 북한당국이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과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 봉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장화와 뇌물로 인한 처벌 회피의 편법이 있으며, 북중 국경지역의 밀수망과 국경경비대와 군의 조직적인 연계 때문에 근본적인 ‘국경’ 폐쇄가 불가능에 가깝다.

2.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실전쟁 수행

건설적 선전은 국가 차원의 거대한 ‘진실 프로젝트’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심리전의 명칭도 북한주민 또는 당국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트루먼(H. Truman) 시기에는 ‘진실전쟁(campaign of truth)’, 레이건(R. Reagen) 시기에는 ‘진실 프로젝트(truth project)’ 또는 ‘자유의 십자군(crusade for freedo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급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독일군에서도 과거 냉전기에는 ‘심리전(PSK)’이라고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작전적 커뮤니케이션(Operative Kommunikation)’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냉전기 시절에 사용하던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상대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개념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적이고 가공적인 정보유입과 인식의 강제적 전환을 암시하는 ‘심리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진실’을 알리고 북한의 거짓 선전선동을 반박하는데 중점을 두는 개념이 적절하다.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북한당국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측에 유리하고, 반박하면 할수록 북한 측에 불리한 형태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 ‘진실 프로젝트’의 좋은 예로 북한의 거짓 선전선동을 바로잡아 보도하는 ‘역선전’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거짓선전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메랑 효과를 겨냥하는데 목표를 두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조선중앙방송 보도 내용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후에는 노동신문 내용에 대한 논평과 오류시정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사실관계’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송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송출도 국가차원의 전 방위적인 프로젝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군 간부 및 장병들에게 당국의 선전과 정책의 허점, 오류를 짚어내어 그들의 주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또한 남북한 간 현실상을 정확히 비교해서 알려주는 정보확산자인 ‘멀티플리케이터’(multiplier)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북한내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보는 당국의 선전이 아니라 장마당이나 가정 등 ‘틈새사회’를 통해 유통되는 ‘입소문’으로 전달되는 정보들일 것이다. 이러한 구전을 통한 정보는 주민들 간에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없어 적발되기도 어려우며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산하는 정보전달자인 멀티플리케이터로는 탈북자 출신의 장교, 학자, 지식인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내 거주하는 모든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탈북자 3만 명 전원이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실전사’ 또는 ‘멀티플리케이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사회내로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들 정보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으로 확산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북한 현지 친인척들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달될 수 있다.

대북 정보유입은 국제적인 공조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 하원은 2017년 12월 북한내부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법안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2017. 12. 6). 이에 따르면 대북 정보유입기기로서 라디오뿐만 아니라 USB, SD카드, 음성 및 영상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전자매체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영국 BBC방송도 2017년 8월 대북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17. 8. 26). 북한은 외부 라디오 방송청취자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취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킹(R. King) 미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주민의 34%가 정기적으로 해외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뉴시스, 2017. 10. 9).

3. 한국의 정보유입 방향: 파괴(destroy)에서 유도(Induce)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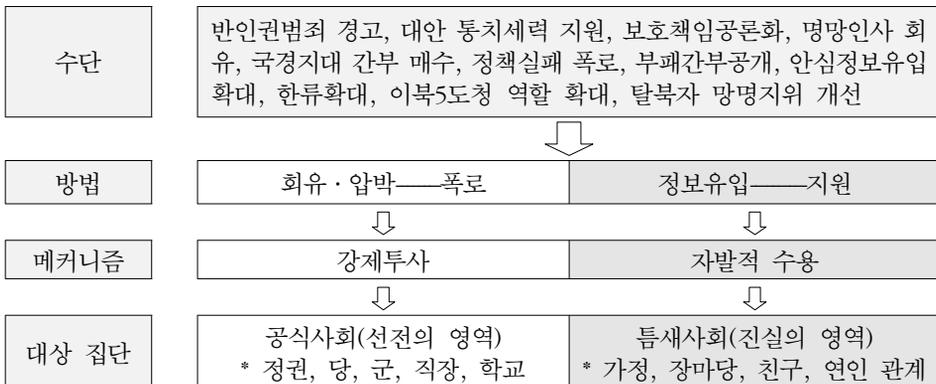
한국에서 적용해야 할 정보유입과 건설적 선전은 파괴보다는 ‘유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유도는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북한주민의 ‘마음’이라는 무형적 차원의 변화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 부적절한 수단 및 간계를 통해 지어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조작(manipulate)’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Webster 2017). 중요한 것은 유도를 통해 북한정권으로부터 민심을 분리시키고, 주민과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확장시키며, 통치엘리트간의 분열을 조작하여 북한체제 변혁을 꾀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있다.

유도의 전략적 고민은 북한정권의 폭압적 통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스스로 이탈하도록 용기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정권에 의한 주민통제의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선순환 고리로 전환할 것인가에 있다. 북한체제에 작동되고 있는 북한정권의 주민통제 악순환 사슬은 ‘정권의 폭압 → 주민의 체념 → 정권의 선전선동 → 주민의 고립’으로 이어져 있다.

주민들의 노예적 구속은 이러한 악순환의 사슬에 의해 제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슬을 끊어 내는 것이 바로 유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도는 '북한 정권의 폭압을 완화 → 주민들의 정보접촉면확대 → 진실대면의 일상화 → 주민의 계몽'의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의식 계몽과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확장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워낙 오랫동안 당연시하며 사용해왔던 당국의 '폭력'을 주민들이 '정당한 폭력'으로 수용하지 않고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유도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첫째, 정권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분리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정권에는 절망감, 공포심, 냉철함의 신호를 보내어야 하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그와 상반된 희망, 경의심, 관대함의 메시지를 보내어야 한다. 둘째, 군사수단과 비군사 수단을 결합하여 심리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군사수단에는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전력과 군사 외교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북한사회에 내재된 정권-주민 심리에 대한 비대칭 공간을 공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권의 억압욕구와 주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심리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권의 조작과 허위선전에 비해 주민들은 진실에 대한 욕구가 대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공식적인 자아와 비공식적인 자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식사회에서 표출되지 못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틈새사회를 공략해야 한다.

〈그림 3〉 한국의 정보유입 전략 : 유도



대북 정보유입의 핵심고려 사항은 북한사회의 특성에 따라 외부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영역과 저항하는 영역이 구분된다는 점에 있다. 북한정권, 당, 군, 직장, 학교와 같이 북한체제가 요구하는 공식이념을 집행하는 ‘공식사회’는 외부정보에 극도의 배타성을 띠고 있다. 반면, 가정, 친구, 연인관계나 장마당과 같은 틈새사회는 비공식 영역으로서 진실한 정보를 갈망하는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에 외부정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수용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강제투사의 방법을, 후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수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강제투사는 북한의 공식사회를 겨냥하여 회유, 압박, 경고, 폭로 등으로 정권을 곤혹스럽게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관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이중 정보유입 방법이다. 자발적 수용이란 북한 틈새사회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유통시키고 자발적으로 알고 싶어 하거나 호기심을 느끼는 정보를 개발하여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를 공략하는 정보유입은 신뢰성 있는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V. 결 론

서독의 대동독 심리전에 관한 사례연구는 한국의 대북 심리전 전략에 적지 않은 함의를 준다. 남북한과 유사한 안보환경을 경험한 동서독 관계에서 수행했던 서독 연방군의 심리전의 변화과정과 한계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군 심리전 업무수행에 큰 참고점이 될 것이다. 특히, 서독 브란트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시행 전후의 서독의 정보유입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대북심리전의 현주소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동독과 북한이 ‘냉전’과 같은 체제외적 구조의 영향 하에 있는 행위자라는 점, 그리고 국경독재체제라는 체제내적 속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냉전적 속성과 국경독재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은 심리전이 북한의 정권생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남북체제 경쟁은 진실을 수단으로 의지를 강요하는 심리전의 연속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구호 하에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체제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

로 보인다. 냉전도 이와 유사하게 핵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위협과 인류공멸이라는 극단적인 공포심이 지배했었다. 역설적이게도 신중하지 못한 폭력의 사용이 대량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냉전은 오히려 비폭력 갈등양상을 띠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띠게 되었다(Osgood 2006, 35). 냉전이 심리전의 영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Reuth 1956, 89-90), 남북 간에도 서로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고강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정적인 핵억제 상황이 도래할수록 심리전의 역할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은 국경독재체제에 있어 대북 심리전은 정권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경독재체제로 작동되는 동독체제의 붕괴와 심리전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경독재는 유무형적으로 고립된 환경과 조건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폭압정권은 정권안보를 기준으로 '적과 동지'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북한도 3대 세습체제라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동조여부로 적과 동지로 철저히 구분된다. 북한은 이상화되고 신성화된 관습적 권위에 의해 3대 세습체제가 정당화되는 권력교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봉건적 방식의 권력세습은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 고도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모든 명운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국경을 내부로부터 수호하는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북한의 국경독재체제는 핵무기의 체제수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영역, 즉 내폭(주민의 불만)과 '국경의 심리적 훼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내부가 되었건 외부가 되었건 국경의 '개방'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할 것이다.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여는 순간 북한은 붕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국경독재체제이다. 또한 정보유입을 비롯한 각종 심리전은 심리적, 무형적 국경을 개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바로 여기에 북한문제 해결의 기회와 공간이 생겨난다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체제경쟁의 우위에 있는 국가는 '파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설'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자신 있게 선전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현재처럼 한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기반으로 북한주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건설적 선전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흥미위주의 한류 확산이 체제변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도 적어도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통제력 상실'의 신호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는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의 통제와 학습이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과 주민들 사이에 한국 영상물 시청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통제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의 권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만약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공포심'이 사라지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정권에 대한 집단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다. '공포'에 의존하는 북한의 통치기제를 북한 주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경독재체제는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내부로 '진실'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투고일 : 2018.01.02.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일 : 2018.02.28.

참고문헌

- 김동성. 2007. 『북한의 대남심리전』,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태현. 2015. “냉전기 서독연방군의 심리전체계 연구: 조직과 전략,”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2호.
- 김태현. 2017. “북한의 국경독재체제와 핵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3권 3호.
- 와다 하루끼. 2012. 『북한현대사』. 파주: 창비.
- 양무진. 2011. “선전선동 사례연구: 나치독일, 중국, 북한,” 『현대북한연구』 14-3.
- 이경직. 2014.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북한연구학회보』 18-2.
- 이광현. 1993. 『현대사회와 심리전략』, 파일.
- 정상돈. 2017. “동독내 서독정보 유입의 과정과 방법,”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 조영갑. 2006. 『국방 심리전략과 리더십』, 서울: 북코리아.

Arnold, Klaus. 2002. *Kalter Krieg im Aether: Der Deutschlandsender und die Westpropaganda der DDR*, Muenster/ Hamburg.

BA-MA, VA-P-01/5916, Bl. 4 f., Informationsbericht der PHV vom 7. 1. 1966.

BA-MA, AZN Strausberg P-2977, Bl. 266, “Bericht ueber die Meinungsumfrage der PHV zu Problemen des VIII. Parteitages der SED, September 1971”

BA-MA, P-1262, Bl. 102. Bericht der Parteikontrollkommission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r Grenztruppen ueber feindliche Einfluesse vom 12.3.1973.

Bericht der HA I zur politische-ideologischen Diversion in der NVA fuer das Jahr 1961 vom 16. 1. 1962.

Bl.20, Informationsbericht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s Militaerbezirks Leipzig ueber die ideologische Diversion des Gegeners vom 16.12.1972.

Bl.80, Informationsbericht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r Grenztruppen ueber die ideologische Diversion vom 19.12.1972.

BStU. 1970. MfS HAXX ZMA 914, Obtained by A. Ross Johnson. Translated by Christian Ostermann; Document No. 4. *Stasi Report on West German Government's Attitude to RFE and RL*, Berlin.

- BSStU. 1970. HA I 5865, Bl. 256-265, Informationen ueber die Reaktion der NVA-Angehoerige auf den Briefaustausch zwischen Willi Stoph und Willy Brandt von 3.3.1970.
- Buchbender, Ortwin. 2001. "Auftrag Menschlichkeit: Die 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beziehungen e. V. 1963-1991," in : *Europaeische Sicherheit*. Vol. 3.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1990. *Mitteilungen an die Presse vom 29. Maerz: Psychologische Verteidigung ist keine Friedenaufgabe der Bundeswehr mehr*, Bonn.
- Clausewitz, Carl von. 1976. Translated and Edited by Peter Paret,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devilla, Angelo. 1989. "Political Warfare," in: Barnett, Frank. *Political Warfar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Rethinking the US Approach*. Washington D. C.: NDU Press.
- Department of Defense. 2011. *JP 3-13.2: Military Support Information Operations*, Washington D. C.: DoD.
- Diesener, Gerald. 1996. Propaganda in Deutschland.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Massenbeeinflussung im 20. Jahrhundert. Darmstadt: Primus.
- Drews, Dirk. 2006. *Die Psychologische Kampffuehrung/Psychologische Verteidigung der Bundeswehr: eine erziehungswissenschaftliche und publizistik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Johannes Gutenberg-Universitaet Mainz.
- DVW1/43824, Bl. 253, Befehl Nr. 136/82 des Ministers fuer Nationale Verteidigung ueber Kader vom 19.1.1983.
- Galtung, Johan. 1975. *Strukturelle Gewalt, in: Beitraege zur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Reinbek bei Hamburg.
- Gaus, Günter. 1987.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München.
- Johnson, A. Ross & Parta, R. Eugene. 2010. *Cold War Broadcasting: Impact o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Kirsch, Martin. 2014. "Die Psychologische Verteidigung der Bundeswehr bis 1990," in: *IMI-Studie Nr. 7/2014* (2014. 12. 3.)
- Kraemer, Sonja I. 1997. Westdeutsche Propaganda im Kalten Krieg: Organisation und Akteure, in: Jeurgen Wilke: *Pressepolitik und Propaganda: Historische Studien vom Vormaez bis zum Kalten Krieg*, Koeln/Weimar.
- Lindenberger, Thomas. 1999. "Die Diktatur der Grenzen zur Einfuehrung," in :

Herrschaft und Eigensinn in der Diktatur, Koeln.

OpInfo-Truppe. 2009. *50 Jahre durch Ueberzeugen Gewinnen 1959-2009*. Operative Info-Truppe.

Paddock, Alfred. 1989. "Military Psychological Operations," in: Barnett, Frank. *Political Warfar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Rethinking the US Approach*. Washington D. C.: NDU Press.

P-1540, Bl. 164, *Information der Parteikontrollkommission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r Grenztruppen an die Parteikommission der PHV vom 29.8.1978*.

P-1737, Bl. 42-44, *Information ueber Erscheinungen des "Verlassens des Klassenstandpunktes" an der Unteroffizierschule der Grenztruppen vom 21.7.1980*.

Referat zur Jahreskonferenz des MiS ueber die Einschaeztung der Arbeitsergebnisse im Jahr 1964, o. D.

Reuth, Heinz. 1956. *Psychologische Kampffuehrung*, in: *Schriftenreihe zur Wehrpolitik, Heft Nr. 10*, Bad Godesberg.

Rogg, Mattias. 2008. *Armee des Volkes? Militaer und Gesellschaft in der DDR*, Berlin: Ch. Links.

Sabrow, Martin. 2012. *1989 und die Rolle der Gewalt*, Goettingen: Wallstein Verlag.

Schmitt, Carl. 1963. *Der Begriff des Politischen: Text von 1932 mit einem Vorwort und Drei Corollarien*, Berlin: Dunker & Humboldt.

Simpson, Christopher. 1961. *Science of Coercion: Communication Research and Psychological Warfare 1945-1960*,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Taylor, Philip M. 2003. *Munitions of the Mind: A History of Propaganda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present 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VA-P-01/7576, Bl. 34, *Sonderinformation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s Militaerbezirks Neubrandenburg vom 8.12.1972*.

VA-P-01/7576, Bl. 19, *Informationsbericht der Politischen Verwaltung des Militaerbezirks Leipzig ueber die ideologische Diversion des Gegners vom 16.12.1972*.

Wagner, Armin & Uhl, Matthias. 2007. *BND contra Sowjetunion: Westdeutsche Militaerspionage in der DDR*, MGFA; Ch. Links.

Wenzke, Ruediger. 2005. *Staatsfeinde in Uniform? Widerstaendiges Verhalten und Politische Verfolgung in der NVA*, Berlin: Ch. Links Verlag.

Wilke, Juergen. 2004. *Radio im Geheimauftrag*, in: Klaus Arnold, *Zwischen Pop und*

Progaganda, Radio in der DDR, Berlin.

『동아일보』. 2017년 11월 12일.

『조선일보』. 2017년 8월 26일, 2017년 12월 27일.

『조선중앙통신』. 2017년 12월 24일.

『매일경제』. 2017년 12월 5일.

『연합뉴스』. 2017년 12월 6일.

『뉴스시스』. 2017년 10월 9일.

Der Spiegel (1989. 5. 15).

Sueddeutsche Zeitung(1958. 11. 19).

Wall Street Journal(2015. 4. 14).